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 305억

미지급 사태도 발생... 김광수 의원, "임금 현실화·근무환경개선비 등 처우개선 예산확보 시급"

지난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로 약 27만명이 보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은 계속 증가해 5년간 20배 넘게 증가했고 최근 미지급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신설 이후 연도별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은 2017년 305억원으로, 2012년 15억원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 기준 서울,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근무환경개선비를 포함한 보육교사 관련 예산의 과부족예상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012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근무환경개선비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급 시기 연기를 통보하는 등 벌써부터 미지급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 올해 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9월분 근무환경개선비로 22만원이 아닌 8만5,000원만을 지급하고, 부족분과 10~12월 근무환경개선비는 내년에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의원은 "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보육교사들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군 장성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추무실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장인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있지만, 현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속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는 근무환경개선비로 인해 보육교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근무환경개선비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교사의 안정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나아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의 첫 걸음"이라며

"보육교사의 임금 현실화·근무환경개선비 예산 확보 등 현실을 반영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진성 재판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현재 8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이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으로 선임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법관 재직 시에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기에 장기근속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룰 적임자"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현재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 관계없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장기화된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헌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를 의식했다.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지명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 지명하게 됐다"며 "처제에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 소장 공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게 해 달라. 국회 입법의 미비 상황도 원만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뒤편으로 지난 2012년 9월20일 재판관에 임명된 이 소장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로서는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까지 간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정동영 의원, 혁신도시 주민 간담회 개최

최근 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덕진구를 선택한 가운데 전주 병 지역 정동영 의원이 긴급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대다수의 주민들이 완산구를 선택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결과는 덕진구였다.

이에 덕진구 지역 국회의원이 정동영 의원이 주민감사 기간에도 지역을 방문해 발 빠르게 혁신도시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전북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전북개발공사 1층 강당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함께 자리한 김종철 도의원, 박선이 덕진구청장,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은 3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직접 들으며 소통에 나섰다.

세 살 딸아이를 둔 한 주부는 "혁신도시에 유치원이 부족하고 인근 팔복동에 폐기를 소각하는 방식의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해서 환경문제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강문제로 인해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결심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사했다는 한 주민은 "인근에 퇴비 연구 시설 때문인지 악취가 진동해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다. 어렵게 이사했는데 도무지 버티기가 힘들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수 십명의 주민들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각자가 느끼는 불편과 혁신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털어냈다.

정동영 의원은 "여러분들의 열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포이기가 좋은 시간을 골라 자리를 마련해서 되는 건 확실히 해결하고 안되는 건 왜 안되는지 설명하며 소통하도록 약속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인순, '사랑의 열매', 정치편향 기금 배분 주장

공동모금회, 100억원 '통일기금공익신탁' 기탁·중증질환에 재난적 의료비 949억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정치 편향적으로 기금을 배분해 박근혜정부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지난 2015년 11월24일 성금 중 100억원을 하나은행에 '통일기금공익신탁'으로 기탁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통일대박론'에 공동모금회가 동조해 성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금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 모금기관이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통일기금공익신탁'은 원칙적으로 통일전에는 원금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운용수익만으로 배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들이 기탁한 소중한 성금 100억원을 금융기관에 묶어 놓고 운용수익으로 배분지원을 하는 일은 선량한 기부자를 속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모금회는 또 저소득층 중증질환에 재난적 의료비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949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역시 박 정권의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분이라고 남 의원은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수행해야 마땅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모금회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949억원을 지원한 것은 회장 등 몇몇 사람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일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성금을 정권의 쌈지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모금회는 정권과 밀착해 열악한 사회복지 기관 및 소외계층에 지원돼야 할 성금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쌈지돈으로 전락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스

고영주, 국감 중 한국당 의총 참석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논란 되고 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한국당 신상진 의원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이사장은 점심 일정으로 어딜 가셨나"라고 묻자 "한국당 의총에 갔다"고 답했다.

"그 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그는 "한국당에서 MBC사태에 대해 알고싶다며 와 달라고 해서 간단히 (한국당의) 질문에 대답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 한 사람으로서 처신을 조심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고 이사장은 "증인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주의를 미리 했나"라고 되받아쳤다. /뉴스스



헤어드라이기 (15cm) 0.1~70ㄾT, 전기면도기 (15cm) 4~60ㄾT, 진공청소기 (20cm) 30~50ㄾT, 전자레인지 (15cm) 2~20ㄾT, 세탁기 (15cm) 0.4~20ㄾT, 송변전설비(송전철탄, 변전소) 송전선아래 1m 높이 0.3~12ㄾT

안심해도 좋습니다!

송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의 세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기기에 비해 적은 양입니다. 송변전 설비에 의한 전자계 노출,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참고사항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전기설비기술기준) 전자계 기준치 : 83.3마이크로테슬라(μT) 자료출처 : 세계보건기구(WHO)보고서, 미국 국립환경건강연구소(NIEHS)

제2회 한국전력 대학생광고대상 입상작(우승)대학교 조은정, 이종호, 진태호